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20. 8.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 목 차 〉

I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미 법무부, 2019년 회계연도에 부정청구법 위반 사건으로 30억 달러 이상 환수 ... 1](#)
- [에콰도르 전 대통령 부패 혐의로 유죄판결 11](#)
- [코로나19 팬데믹: 반부패 유럽국가 연합\(GRECO\) 부패 위험 경고 ... 13](#)
- [프란츠 베켄바워: 부패혐의로 기소된 독일 축구 전설에 대한 재판이
판결 없이 종료 15](#)
- [짐바브웨 보건부 장관 부패 혐의로 체포 17](#)
- [노바티스,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3억4천5백70만 달러 지급 ... 19](#)

II 국제회의 동향

- [2020년 OECD COVID19 관련 공공청렴 화상회의 22](#)
- [2020년 제1차 OECD 청렴작업반 화상회의 23](#)

III 옴부즈만 소식

- [아일랜드: 옴부즈만, 난민신청자 수용소 관련 민원 사태를 보면 관련
정책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다 24](#)
-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코로나19 온라인 민원 센터 개소 26](#)
- [핀란드 : 옴부즈만,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다수 민원 접수 ... 28](#)
- [유럽연합: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 31](#)
- [호주: 빅토리아주 공립학교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 34](#)

1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미 법무부, 2019년 회계연도에 부정청구법 위반 사건으로 30억 달러 이상 환수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2020.1.9)

미국 법무부는 2019년 회계연도에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및 부정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30억 달러 이상을 환수하였으며, 이 중 26억 달러는 의료분야에서 발생하였다.

- 미국 법무부 민사과 조디 헌트(Jody Hunt) 차관보는 2019 9월 30일로 종료된 2019년 회계연도에 정부를 상대로 발생한 부정 청구 및 사기와 관련된 합의 및 판결로 30억 달러(약 3조 5천억 원) 이상을 환수했다고 발표했다. 1986년 미 하원에서 부정청구법을 대폭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총 환수액은 620억 달러(약 73조 7천억 원)를 넘어섰다.
- 헌트 차관보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합의와 판결의 상당수를 보면 이번 행정부가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를 억제하고 국민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부정청구법이 이렇게 계속 성공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사건의 조사와 소송, 재판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의 노력과 정부 대상 사기 사건을 신고한 많은 공익신고자 덕분이다’고 말했다.
- 지난 회계연도 동안 법무부에서 환수한 30억 달러(약 3조 5천억 원) 상당의 합의금과 과징금 중에서 26억 달러(약 3조 8백억 원)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제조사, 관리 의료서비스 제공자, 병원, 약국, 호스피스 기관, 실험실, 의사 등을 포함하여 의료산업과 관련된 것이다. 미 법무부가 민간 의료 분야 사기행위의 합의금 및 과징금으로 환수한 금액은 올해로 10년 연속 20억 달러(약 2조 3천억 원)를 초과했다. 26억 달러(약 3조 8백억 원) 중 20억 달러(약 2조 3천억 원)는 연방 정부 기금에서 발생한 손실만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많은 사건에서도 연방 법무부는 각 주의 메디케이드(Medicaid) 부정청구와 관련하여 수백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환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 이처럼 부정청구법은 의료급여 관련 부정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주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정부기관의 운영 및 기능과 관련하여 연방 정부 기금이나 자산에 대한 부정청구를 바로잡기 위한 주요 민법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부정청구법에 따라 공공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장비를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군대와 응급요원들을 보호한다. 또한 관세법과 무역협정, 비자 관련 요건, 중소기업 보호 등의 준수를 촉진하여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한다. 재난구호금부터 농업 보조금까지 광범위한 정부의 주요 지원 정책들을 보호하기도 한다.
- 1986년 미 의회는 정부를 대신하여 부정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포상금을 증액하는 등 부정청구법을 강화했다. 이들 공익신고자들이 정부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부정청구법 사건 관련 소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공익신고자가 정부를 대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측이 승소할 경우 신고자는 보통 환수된 금액의 15~3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2019년 회계연도에 정부를 대신하여 제기된 부정청구 관련 소송은 633건이 있었고, 해당 소송과 그 전에 제기된 소송으로부터 법무부가 지난 1년간 환수한 금액은 21억 달러(약 2조 5천억 원)를 상회한다.

의료급여 부정청구

- 법무부는 의료인과 다양한 의료물품 및 의료서비스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법무부는 의료급여 부정청구에 대처함으로써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트라이케어 등 연방정부 의료보험제도의 재원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환자를 위협에 처하게 하고 의료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정수급 시도를 저지하기도 한다.
- 법무부는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제제 오남용 위기 해결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지난 1년간 의료업계에서 환수된 금액 중 가장 큰 금액 두 건을 오피오이드 제제 제조사로부터 환수하였다. 먼저, 인시스 테라퓨틱스(Insys Therapeutics)사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섭시스(Subsys)를 처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기된 형사 및 민사 소송 해결에 대한 합의금으로 1억9천 5백만 달러(약 2,300억 원)를 지급했다. 리베이트는 가짜 행사에서의 연설이나 처방자의 친척이나 친구에게 일자리 제공, 호화스러운 식사와 접대 등의 형태로 제공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인시스사가 의사들에게 암환자가 아닌 환자들에게도 섭시스를 부당하게 처방하도록 유도하고 연방 의료제도에서 이에 대한 의료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 환자의 거짓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번째는 레킷 벤키저 그룹(Reckitt Benckiser Group plc) 사건으로, 오피오이드 부프레노르핀 제제의 아편중독 치료제 서복손(Suboxone) 마케팅과 관련된 형사 및 민사 책임을 해결하기 위해 총 14억 달러(약 1조 6천억 원)를 지급했다. 이 해결안의 일부로서 레킷 벤키저 그룹은 민사 혐의의 해결을 위해 미국에 5억 달러를 지급했다. 제기된 혐의에 따르면 레킷 벤키저 그룹은 안전하지 못하고 효과적이지 않으며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서복손을 홍보했고 서복손이 다른 부프레노르핀 제제보다 오남용의 위험성이 적고 영유아가 사고로 노출될 경우의 위험성도 적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담고 있는 영상을 배포했다. 또한 서복손의 가격을 통제하기 위하여 복제약품의 시장 진출을 지연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법무부는 제약사들이 연루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일레로, 아바니어 파마수티컬(Avanir Pharmaceuticals)은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치매 환자들의 일반적 행동 증상에 대한 사용 허가가 되지 않은 뉴덱스타(Neudexta)를 처방하도록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허위 정보에 근거한 마케팅을 펼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9천5백만 달러(약 1,100억 원)를 지급했다. 또한 메디케어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약값을 끌어올리려는 제조사들의 시도에 대한 조사도 계속했다. 미 의회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본인부담금 조항을 포함시킨 이유는 부분적으로 의료비용의 지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여기에는 제약회사들이 제품에 대한 가격 추이를 감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올해, 7개 제약회사(악텔리온, 암젠, 아스텔라스, 알렉시온, 재즈, 룬드벡, US월드메즈: Actelion Pharmaceuticals US Inc., Amgen Inc., Astellas Pharma US Inc., Alexion Pharmaceuticals, Inc., Jazz Pharmaceuticals Inc., Lundbeck LLC, US Worldmeds LLC)는 명목상으로는 독립적 기업이지만 사실상 중개 역할을 했던 조직들을 통해 자사 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총 6억2천4백만 달러(약 7,300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

- 또한 법무부는 많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환수했다. 예전에는 미라카 라이프 사이언스(Miraca Life Sciences Inc.)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병원체 시험 회사인 인폼 다이어그노스틱스(Inform Diagnostics)사는 의사들에게 전자의료기록(EHR) 시스템을 위한 보조금이나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6천3백50만 달러(약 750억 원)를 지급했다. 전자의료기록 소프트웨어 판매사인 그린웨이 헬스(Greenway Health LLC)사는 자사의 전자의료기록 제품인 ‘프라임 스위트(Prime Suite)’의 성능을 과대광고하고 해당 제품의 사용자들이 제품을 신규 고객에게 추천하면 불법적인 보상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5천7백만 달러(약 670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입원 재활 시설 운영업체인 인컴패스 헬스 코퍼레이션(Encompass Health Corporation) (예전 이름은 헬스사우스 코퍼레이션 HealthSouth Corporation)은 입원재활시설 일부의 시설 자격 유지와 더 높은 비용 보상을 위해 메디케어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학적으로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받았다는 의혹 해결하기 위해 4천8백만

달러(약 560억 원)를 지급했다.

정부조달 사기행위

- 지난해 법무부는 정부의 재화 및 용역 구매와 관련된 다양한 사기 사건들을 조사했다. 일례로 한국 기업인 SK에너지와 GS 칼텍스, 한진, 현대 오일뱅크, S오일은 주한 미군 연료 공급 사업권을 수주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하고, 상호 경쟁하지 않기로 한 합의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에 허위 진술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미 국방부는 비리가 없을 경우 보다 더 큰 금액을 연료 공급 서비스에 지불해야 했다. 해당 5개사는 부정청구법 위반에 대한 합의금으로 총 1억6천2백만 달러(약 1,900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
- 법무부 민사과는 압출 알루미늄 제조사 하이드로 익스트루전 포틀랜드 (Hydro Extrusion Portland Inc.) (예전 이름 사파 프로파일스 Sapa Profiles Inc., SPI)가 계약 상 명시된 사양에 부합하지 않는 압출 알루미늄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정부 계약자가 항공우주국(NASA)과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에 비용을 청구한 데 대한 민사 책임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금으로 3천4백60만 달러(약 400억 원)를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 계약자들은 항공우주국의 로켓과 미사일방어국에 공급되는 미사일에 사용되는 압출 알루미늄 제품을 SPI로부터 구매했다. SPI는 알루미늄 압출의 균질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인장 시험 결과를 변경한 후 이들 계약자들에게 위조된 결과 인증서를 제공했다. 문제의 알루미늄이 사용된 항공우주국의 로켓 몇몇이 폭발하면서 그 안에 탑재되었던 나사 장비들이 손실되었다. 또한 SPI는 동일 제품으로 인해 제기된 형사 혐의에 대한 해결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 법무부는 미 공군과의 전장 통신 계약 두 건과 관련된 부정청구법 위반 혐의 합의금으로 노스롭 그루먼 시스템 코퍼레이션(Northrop Grumman Systems Corporation, NGSC)으로부터 2천7백만 달러(약 310억 원)를 환수했다. 합의안으로 NGSC사는 중동 지역에 배치된 인력의 실제 근무

시간을 의도적으로 위조하여 미 공군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해결하였다.

- 법무부 민사과와의 별도 합의안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브리티시 에어웨이/이베리아 에어라인스는 미국 우정공사(USPS)와의 계약에 따라 외국 우정당국 또는 기타 지정된 수취인에게 미국의 우편물을 운송한 시간을 허위 보고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2천2백만 달러(약 260억 원)와 5백8십만 달러(약 68억 원)를 지급했다. USPS는 이들 항공사들과 계약을 맺고 이들이 미국 내 6개 지점과 해외 국방부 및 국무부 관련 장소에서 미국 우편물을 수거하고 여러 해외 및 국내 목적지로 시간 내에 운송하도록 했다.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인포마티카(Informatica LLC)는 미국 연방총무청(GSA)과의 계약 협상에 적용된 판매가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에 과도한 비용을 청구했다는 혐의를 해결하는 대가로 2천1백57만 달러(약 250억 원)를 지급했다. 인포마티카는 재판매업자에게 제공되는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할인가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재판매업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활용하여 미국 연방총무청 및 연방정부와 계약 협상에 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와 같은 허위 정보로 연방총무청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정부 구매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기타 사기행위 환수 건

- 2019년 회계연도 동안 발표된 판결 및 합의 건 수와 종류를 보면 부정 청구법을 근거로 환수가 결정된 사기 사건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일례로, 듀크 대학교는 연방 기금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신청서와 경과 보고서에 허위 정보를 담아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함으로써 부정청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억1천2백50만 달러(약 1,300억 원)를 지급했다. 버지니아 소재 방산업체 ADS의 대주주이자 전 CEO인 루크 힐리어(Luke Hiller)는

ADS사가 자격이 없었음에도 부정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할당된 연방정부 계약을 따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2천만 달러(약 230억 원)를 지급했다. 중소기업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와 소유구조, 운영 통제 요건 등을 포함하여 특정한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정부는 힐리어가 ADS사로 하여금 중소기업 자격을 얻기 위하여 회사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고 그 결과 ADS사가 중소기업에 할당된 다수의 계약을 부당하게 수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DS사는 이전에도 유사한 의혹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1천6백만 달러(약 190억 원)를, 그리고 ADS사의 전 법률자문 찰스 살레(Charles Salle)는 22만5천 달러(약 2억 원)를 지급한 바 있다.

- 법무부는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한 적법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업허가증을 부당하게 사용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가스 마케팅 업체 B 찰스 로저스 가스(B. Charles Rogers Gas Ltd., BCR)와 그 소유주들은 연방정부 토지에서 채취한 천연가스의 광물 사용료를 부당하게 축소하려 했다는 혐의를 해결하는 대가로 3백50만 달러(약 41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 천연가스 판매사의 가스 공급 관리자로 일하는 동안 BCR 관련 업무를 했던 또 다른 인물도 문제의 시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80만 달러(약 9억 원)를 지급했다.
- 또 다른 사건에서 오메가 프로틴(Omega Protein Corp.)사와 오메가 프로틴 주식회사(Omega Protein, Inc.)는 연방 환경법 준수 인증서를 위조하여 미국 정부로부터 용자를 받았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1백만 달러(약 12억 원)를 지급했다. 오메가3 피쉬오일과 단백질 첨가 어분제품, 유기농 어즙 등 미국 최대 생산업체인 오메가 프로틴사는 미국 해역에 위법적으로 오염물질과 기름을 배출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무부 산하 국립 해양대기청으로부터 연방 환경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인증서를 신청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노스 그린빌 대학교는 미국 교육부에 허위 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2백50만 달러(약 30억 원)를 지급했다. 고등교육법(HEA) 타이틀IV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학생 보조금을 받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은 학생의 등록 여부에 따라 모집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번 합의로 노스 그린빌 대학교는 인센티브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학생 모집 대행사들에게 등록한 학생 수에 따라 보상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해결하였다.

개인 당사자들에게 책임 묻기

- 법무부는 부정청구법과 기타 민법상의 해결방법을 이용하여 기업뿐 아니라 개인에 의한 정부 대상 사기행위를 막고 해결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위에서 언급했던 루크 힐리어, 찰스 살레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아래의 개인 사기행위에 대한 환수 사례도 있다.
- 법무부는 오스테오 릴리프 인스티튜트(Osteo Relief Institutes) 산하 7개 의료센터 소유주와 개별 의원으로부터 총 7백10만 달러(약 84억 원) 이상의 별도 환수를 위해 협상을 했다. 이 합의로 피고인들은 관절 윤활액 주사요법이나 무릎 보조기 등의 비용을 의료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메디케어에 청구한 혐의를 해결하게 되었다. 윤활액 주사요법은 골관절염의 치료에 쓰이는 방식으로, 관절 윤활액의 역할을 보조하기 위하여 윤활액 역할을 할 수 있는 젤 타입 액체를 환자의 무릎 관절에 주입하는 요법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해당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에게도 관절 윤활액을 주입하고 임상 효과의 근거도 없이 여러 윤활액 제품을 연속해서 사용했으며 외국에서 재수입한 할인된 가격의 윤활액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이들 클리닉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맞춤형 무릎 보조기를 처방한 혐의도 받았다.
- 법무부는 벵가드 헬스케어(Vanguard Healthcare LLC)사가 기준에 못 미치는 양로원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해결하는 대가로 약 1백80만 달러(약 21억 원)를 지급하는 협상을 했고 벵가드사의 대주주·CEO 그리고

전 운영이사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다. 이 두 명은 벵가드 소유의 전문 요양원 5곳이 전반적으로 기준 미달이거나 쓸모없는 양로원 서비스들에 대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25만 달러(약 3억 원)를 지급했다. 이들의 혐의에는 요양원이 처방대로 투약하지 못했던 것, 표준적인 감염 관리와 상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던 것, 욕창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 입주 환자의 기본적인 영양과 위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 등이 포함되었다.

- 또한 법무부는 올해 조제 약국 다이어비틱 케어 Rx(Diabetic Care Rx LLC)사 (페이션트 케어 아메리카 Patient Care America라는 명칭으로 영업)와 사모펀드 리오르단, 르위스 & 하덴(Riordan, Lewis & Haden Inc., RLH)로부터 환자에게 필요 없는 값비싼 통증 크림이나 흉터 크림, 비타민 등의 처방을 의뢰하면 보상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연방정부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트리케어에 허위 청구서를 제출한 혐의에 대한 소송을 종결하는 대가로 2천1백만 달러(약 250억 원)를 지급받았다. 다이어비틱 케어와 RLH사의 합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법무부는 다이어비틱 케어 RX사의 CEO 및 전 운영 대표에게 총 30만 달러(약 3억 원) 이상의 합의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 모든 합의안은 피고인들의 지불 능력에 근거하여 확정되었다.

공익신고자 소송의 환수

- 정부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2019년 회계연도에 환수한 합의금과 과징금 30억 달러(약 3조 5천억 원) 중 21억 달러(약 2조 5천억 원) 는 부정 청구법에 근거하여 공익신고자가 정부를 대리하여 제기한 소송으로부터 환수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정부는 이러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기와 부정청구를 폭로한 개인들에게 포상금 2억6천5백만 달러(약 3,100억 원)를 지급했다.
- 부정청구법의 대리소송 조항에 근거하여 제기된 소송의 숫자는 1986년

이후 상당히 증가했으며 지난 1년간 제기된 소송은 633건으로 매주 평균 12건 이상의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다.

- 헛트 차관보는 ‘공익신고자들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새롭고 복잡한 사기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다. 사기행위를 폭로하기 위하여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개인들로 인해 우리 납세자들은 큰 혜택을 보았다’고 말했다.
- 1986년 찰스 그래스리(Charles Grassley) 상원의원과 하워드 버만(Howard Berman) 하원의원은 부정청구법을 개정했다. 당시 개정안은 주로 공익신고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 신고를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2009년과 2010년에 부정청구법과 공익신고 조항의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미 의회는 부정청구법에 따라 사기행위 예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신고 건을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이러한 권한을 활용하여 정부 재원 지출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이를 보호하였다.
- 마지막으로 헛트 차관보는 법무부 민사과와 검찰청, 감찰감실 및 많은 다른 연방정부와 주정부 기관의 헌신적인 공무원들에게 지난 회계연도에 이루어진 부정청구법과 관련된 환수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헛트 차관보는 ‘오늘 발표된 성과는 연방정부의 재원을 보호하고 정부 정책의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헌신했던 많은 이들의 대단한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나는 민사과에서 오래 일하는 동안 위대한 미국과 미국인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많은 뛰어난 공직자들의 헌신을 목격해 왔다’고 말했다.

※ 원문기사 : The United States Justice Department Recovers over \$3 Billion from False Claims Act Cases in Fiscal Year 2019 (2020.1.9,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에콰도르 전 대통령 부패 혐의로 유죄판결 (The New York Times, 2020.4.7)

에콰도르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전 대통령은 공공계약 수주와 관련하여 8백만 달러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8년형이 선고되었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 온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향후 수년 동안 에콰도르의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에콰도르 대법원은 지난 화요일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전 대통령의 부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력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분열을 조장했던 코레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은 요원해졌다.
- 사회주의 진영의 코레아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Hugo Chavez),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다 실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등 중남미 전역에서 좌파 지도자들이 정권을 잡던 2007년~2017년 당시 에콰도르의 대통령이었다. 그 이후 좌파 진영의 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중남미 지역에서 최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사태로 최근 공중보건의 위기가 극심한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에콰도르의 의료 자원이 부족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체제 역시 경색되고 있다. 과야킬(Guayaquil)시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사망했고 길거리에 쌓인 시신들이 몇 시간 동안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다.
- 코레아 전 대통령은 2012~2016년에 공공계약 수주 대가로 8백만 달러 (약 9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호르헤 글라스(Jorge Glas) 부통령을

포함한 20명의 인물들과 함께 기소되었다. 코레아 전 대통령은 3년 전 국외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이번 유죄판결이 나오면서 (항소 가능) 본국 귀환 시 체포 대상이 된다.

- 코레아 전 대통령(57세)은 징역형과 더불어 향후 25년간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다.
- 에콰도르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번 유죄판결은 내년 대선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간의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코레아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과 측근들의 향후 선거 출마를 가로막기 위해 의도된 정치적 핏박이라고 주장했다.
- 2017년 퇴임 후 코레아 전 대통령은 벨기에로 거처를 옮기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으나 이후 행보를 전환했다. 코레아는 ‘조국을 되찾아야 할’ 의무감을 강력히 느꼈다고 말하면서 2021년 출마에 관심을 내비쳤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마는 불가능하게 된다.
- 정치 평론가 라파엘 발다(Rafael Balda)는 ‘코레아는 역설적이게도 에콰도르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면서도 가장 비호감인 정치인이다. 코레아의 출마 자체가 현재 시민혁명운동(Movimiento Revolucion Ciudadana)으로 이름을 바꾼 그의 소속 정당의 인지도를 높여줄 수 있고 정당을 대표하여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번 사건은 코레아의 전 보좌관이 코레아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찾아낸 파일 제목 ‘초록 쌀(Arroz Verde)’에서 이름을 딴 경찰 조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밀 호하스(Mil Hojas)의 기사에 공개된 문제의 파일에는 몇몇 기업과 개인들이 코레아 전 대통령 정당의 선거활동에 지원한 금액과 지급 날짜, 이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문기사 : Ecuador’s Former President Convicted on Corruption Charges (2020.4.7, The New York Times)

코로나19 팬데믹: 반부패 유럽국가 연합(GRECO) 부패 위험 경고

(Council of Europe, 2020.4.21)

반부패 유럽국가 연합은(GRECO)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투명성이 부패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반부패 유럽국가 연합(GRECO)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야기된 보건 위기 상황에서 5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부패 예방 목표 지침을 발표했다.
- 반부패 유럽국가 연합의 마린 므르셀라(Marin Mrcela) 의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부패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보건 분야에서 의료 물자의 즉각적 필요와 조달 관련 규정의 간소화, 의료시설 과밀과 의료진의 부담 등으로 인하여 위험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 또한 므르셀라 의장은 ‘세계 각국이 부정할 수 없는 긴급 상황과 권력의 집중, 시민 권리와 자유의 침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많은 돈이 경제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부패의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팬데믹 관련 조치에 대한 결정들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적절한 감시와 책임 하에 이행되어야 한다. 보건 분야의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반부패 유럽국가 연합 의장은 공공부문의 투명성이 어떤 형태이든 부패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위기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팬데믹의 확산 및 위험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응을 위한 조치와도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투명성이나 책임성 등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손상되게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투명성 전담 포털사이트 등 디지털 정보 플랫폼은 매우 유용한 부패 예방 수단으로서 법치주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 부패 관행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여러 위험성들 중에서도 이해충돌이나 로비, 허위 의료 제품의 마케팅 등과 관련된 코로나19 관련 사기 등으로 공공조달과 의료 서비스를 위한 뇌물 제공 및 신제품 연구개발의 부패 등과 연관될 수 있다.

※ 원문기사 : COVID-19 pandemic: GRECO warns about corruption risks (2020.4.21, Council of Europe)

**프란츠 베켄바워: 부패혐의로 기소된 독일 축구 전설에 대한 재판이
판결 없이 종료** (BBC Sports, 2020.4.28)

2006년 독일 월드컵 개최와 관련하여 국제축구연맹(FIFA) 임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독일의 전설적 축구선수 베켄바워에 대한 재판이 코로나19로 지연되었고 그 사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재판이 종결되었다.

- 독일 축구계의 전설 프란츠 베켄바워(Franz Beckenbauer)에 대한 부패 혐의 재판이 판결 없이 종료되었다.
- 스위스에서 지난 5년간 계속된 재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류되었고 그 사이에 공소시효가 끝나버렸다.
- 베켄바워는 2006년 월드컵과 관련된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는 네 명의 인물 중 하나였다.
- 1974년에는 선수로, 1990년에는 감독으로 월드컵을 우승한 베켄바워 (74세)는 혐의를 부인했다.
- 국제축구연맹(FIFA)은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 또한 FIFA는 성명서에서 '사건이 어떠한 결론도 없이 이렇게 종결되어 버린 것은 축구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법집행과 관련해서도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 스위스에서 비리 혐의에 대하여 형사재판 절차가 이행될 수 있는 최대 시한은 15년이다.
- 사건이 2005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스위스 법원은 더 이상 베켄바워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베켄바워는 독일이 2006년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될 당시 월드컵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었다.

- 베켄바워는 FIFA 임원이던 모하메드 빈 함맘(Mohamed bin Hammam)에게 총 8백40만 파운드(약 1,250억 원) 상당을 두 번에 걸쳐 건넨 혐의로 2005년에 기소되었다.
 - 베켄바워는 2015년 10월 자신은 '표를 얻기 위하여 아무에게도 돈을 준 바가 없다'고 말했다.
 - 2000년 7월에 열린 2006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독일은 12대 11로 남아공을 꺾고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되었다.
- ※ 원문기사 : Franz Beckenbauer: Trial of German football legend on corruption charges ends without verdict (2020.4.28., BBC Sports)

짐바브웨 보건부 장관 부패 혐의로 체포 (Voice of America, 2020.6.20)

짐바브웨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장비의 조달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체포된 후 보석석방 되었다.

- 짐바브웨의 보건부 장관이 코로나19 관련 의료장비의 불법 조달 부패 혐의로 그제 체포된 후 토요일에 보석금 600달러(약 70만 원)를 지불하고 석방되었다.
- 오베디아 모요(Obediah Moyo) 보건부 장관의 변호인인 제임스 무티즈와(James Mutizwa)는 토요일 하라레에 위치한 치안법원 밖에서 기자들에게 ‘보석이 허가되었고 장관은 석방되었다. 그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모요는 짐바브웨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6천만 달러(약 716억 원) 상당의 물자 조달과 관련하여 공권력을 남용한 세 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모요의 체포 이후 의사 단체는 코로나19 대응 자금 유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짐바브웨 공중보건의협회의 니이카 마하치(Nyika Mahachi) 회장은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비정치적 단체로서 공중보건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는 코로나19 대응과 보건 서비스 및 전반적인 공공 서비스에 할당된 재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범인이 누구든 간에 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 질 수 있도록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17년 취임 이래 에머슨 음낭가과(Emmerson Mnangagwa) 짐바브웨 대통령은 전임자인 고 로버트 무가베(Robert Mugabe) 대통령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연루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 정보부 닉 망와나(Nick Mangwana) 장관은 토요일 성명서를 내고 '공직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라면 음탕가와 대통령의 뇌물 척결 의지를 의심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누구든 뇌물을 받으면 기소될 수 있고 법정에서 서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 모요는 이번 달 안으로 법원에 출두하여 재판 날짜를 받게 될 예정이다.
- ※ 원문기사: Zimbabwe Health Minister Detained on Corruption Charges (2020.6.20, Voice of America)

노바티스,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3억4천5백70만 달러 지급

(The FCPA Blog, 2020.6.25)

노바티스는 그리스, 베트남, 대한민국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에 3억4천6백7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거대 제약회사 노바티스(Novartis AG)와 그 자회사 2곳이 (현 자회사와 전 자회사) 그리스와 베트남, 대한민국에서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한 데 대한 벌금과 부당이득환수로 3억4천6백70만 달러(약 4,100억 원)를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에 지급하기로 지난 목요일 합의했다.
-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행정명령에 따라 노바티스를 해외부패방지법 상 회계관리와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노바티스는 9천2백30만 달러(약 1,100억 원)를 지급하고 판결 전 이자액으로 2천50만 달러(약 24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그리스와 베트남, 대한민국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통하여 9천2백30만 달러(약 1,1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 노바티스의 자회사인 노바티스 헬라스(Novartis Hellas S.A.C.I.)는 미 법무부와 2억2천5백만 달러(약 2,660억 원)의 벌금과 기소유예 3년에 합의했다.
- 노바티스 전 자회사 알콘Pte(Alcon Pte Ltd.)은 별도로 8백90만 달러(약 105억 원)의 벌금을 물고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 노바티스와 각 지역 자회사와 계열사들은 그리스와 베트남, 대한민국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의료인들에게 부적절한 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이 노바티스의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2012~2016년 사이에 발생했다.
- 그리스에서 노바티스는 ‘핵심 여론 주도층’이라고 생각되는 의료인들

에게 행사 참여 시마다 5천 달러(약 600만 원) 이상을 지급했다. 그 대가로 해당 의료인들은 시력 감퇴 치료제인 노바티스의 루센티스(Lucentis)를 처방했다. 노바티스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를 투자 수익으로 보고있었고, 일부 의료인들은 그들의 '장려금'을 해당 약품 처방량에 따라 조정받기도 했다고 미 법무부는 설명했다.

- 검찰에 따르면 노바티스 영업사원들은 의료인들에게 자사 제품의 처방과 처방량이 '장려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주곤 했다.
- 2011년 노바티스와 합병한 알콘사는 2019년 분리 이전까지 간접적인 완전소유 자회사였다. 이번 미 법무부 조치 대상이 된 알콘 사업부는 알콘Pte로, 베트남에 대표 사무실을 두고 싱가포르에서 경영감독을 하고 있었다.
- 알콘 베트남(Alcon Vietnam)은 베트남 판매사를 이용하여 알콘의 안구 내 렌즈 제품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의료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이러한 뇌물 제공은 2011년 알콘이 노바티스에 합병된 이후까지 계속 되었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
- 노바티스 대한민국 사업부는 제3자 의학 저널에 1천6백30만 달러(약 190억 원) 이상을 지급했는데, 이 금액 중 일부는 의료인에게 불법적인 사례비 명목으로 전달되었다.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노바티스에게 5천 30만 달러(약 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2020년에는 같은 행위로 야기된 위법에 대하여 3만 5천 달러(약 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 열악한 관리감독 환경은 불법행위라는 꽃을 피우는 토양이 된다. 노바티스의 위법행위가 보여주듯 사업의 한 부분에서 드러나는 약점을 살펴보면 그보다 더 큰 미해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해외부패방지법 부서장 찰스 케인(Charles Cain)이

목요일 발표된 보도자료를 통하여 말했다.

- 노바티스는 목요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확인한 바와 같이 노바티스와 자회사들은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이미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또한 현재 노바티스는 자사에 대한 해외부패방지법 관련 모든 조사가 종결되었다고 말했다.
- 노바티스는 2016년 자사 제품 처방을 위하여 의사와 기타 의료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중국 자회사 두 곳과 관련한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합의를 위하여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2천5백만 달러(약 300억 원)를 지급한 바 있다.

※ 원문기사 : Novartis pays \$346.7 million to resolve widespread FCPA offenses (2020.6.25, The FCPA Blog)

2 국제회의 동향

1 2020년 OECD COVID19 관련 공공청렴 화상회의

□ 회의 개요

- 일시 : '20.5.13.(수) 21:00-23:00 (프랑스 현지 시간 14:00-16:00)
- 장소 : zoom 프로그램을 통한 화상회의
- 주제 : 반부패와 청렴 :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을 위한 보호장치
- 참석자 : OECD 회원국 및 참관국, 학계, 언론 등 사전 등록한 대중 1000여명 이상 참석

□ 주요 내용

-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청렴, 공공재정 건전성이 부패와 뇌물로 위협받고 있음
- 정부는 ▲신뢰성과 제어력,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해야하며 ▲법치주의 원칙을 수호하면서 ▲공공조달 분야에 대한 청렴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함
 - 의료물자 및 응급시설 등에 대한 조달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면 가격 상승 및 품질 하락 등 소비자(대중)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정부와 국제기구는 비상상황에서도 국제상거래가 청렴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소유주 정보 및 조세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함
-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 연대를 강화해야하며, 탐사언론 기능 확대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2 2020년 제1차 OECD 청렴작업반 화상회의

□ 회의 개요

- 일시 : '20. 5. 25.(월) 21:00-23:00 (프랑스 현지 시간 13:00-15:00)
- 장소 : OECD 측에서 마련한 ZOOM 프로그램을 통한 화상회의
- 참석자 : OECD 공공행정위원회, 청렴작업반 회원국 및 참관국 약 80여명 참석

□ 주요 내용

- OECD 사무국은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을 위한 공공 청렴'을 마련하여 관련 내용을 청렴작업반과 나누고 회원국들의 코로나 극복 사례를 공유함

▶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을 위한 공공 청렴

- 코로나19 위기로 정부는 신속한 의사 결정과 특단의 조치를 통해 위험에 처한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완화해야할 상황에 놓임
- 비상사태와 잇따른 급박한 대응으로 부정부패가 발생할 환경이 조성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 조치의 효과성이 크게 약화됨
- 따라서 코로나에 대한 단기 대응과 장기 회복에서 공공 청렴을 수호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공공 조달 분야의 청렴, ▲경기 부양책의 책임성, 통제, 감독, ▲공공 기관의 청렴 위반 위험 관리의 세 가지 이슈를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국외출장 자료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에서 원문 조회 가능

3 옴부즈만 소식

아일랜드: 옴부즈만, 난민신청자 수용소 관련 민원 실태를 보면 관련 정책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다 (IOI, 2020.4.24)

아일랜드 옴부즈만은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난민신청자가 오랜 기간 동안 비좁고 부적절한 수용시설에서 거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피터 틴달(Peter Tyndall) 아일랜드 옴부즈만은 난민신청자 수용소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틴달 옴부즈만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성을 고려했을 때 한 가족도 아닌 3-4명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방에서 지내는 것이 얼마나 지속할 수 없는 방식인지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 아일랜드에서 난민신청자와 그 자녀들은 디렉트 프로비전(Direct Provision)이라는 공공수용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주거 시설에 배치된다. 이들의 난민 지위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기본적인 식사와 숙박이 제공된다.
- 난민신청자 수가 급증하면서 현재 난민수용센터의 수용능력은 초과된 상태이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심사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일단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여관 등 임시 시설에 배치되고 있다.
- 틴달 옴부즈만은 난민수용시설 정책과 관련된 민원 처리 경험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한 뒤 위와 같이 말했다. 옴부즈만실이 난민수용시설에 대한 민원 주관기관으로 확정된 후 세 번째 옴부즈만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 옴부즈만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난민수용시설 서비스의 기준이 된 맥마혼 보고서(McMahon report)의 수용소 침실 최소 공간 규정을 1966년 주거법을 적용한 아일랜드 법무부를 비판했다. 당시 법에 규정된 규격은 더블침대를 놓는 데 필요한 공간보다 약간 더 큰 정도였는데 법무부는 이러한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했다. 옴부즈만의 의견에 대해 법무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 이후 한 방에 한 가족

3명 이상 인원을 배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일랜드 난민수용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2018년 30%, 2020년 16% 증가했다. 2019년 옴부즈만실 직원들이 26개 수용시설을 불시 방문하여 조사했다. 옴부즈만실에 접수된 난민수용시설 관련 민원은 10.5% 증가했다 (2018년 152건에서 2019년 168건). 긴급 수용시설에 머무르는 기간, 타 수용시설로의 이동, 아이들의 통학, 조리 시설, 1차 의료서비스와 의료보호카드 이용 가능 여부 등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었다.
- 틴달 옴부즈만은 2019년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호텔와 게스트 하우스, 여관 등 긴급 수용시설에 임시 거주하는 난민신청자들의 국제 보호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2020년 초 아일랜드 전역의 37개 시설에 1,524명의 신청자들이 거주 중이다.
- 옴부즈만은 ‘현재 난민신청자 수용시설은 단기 거주 용도 외로는 부적절하다. 긴급 수용시설은 심지어 더 부적합한 상황이다. 난민신청자들이 최대 16개월 또는 일부의 경우 그보다 더 긴 시간동안 부적절한 시설에 거주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 틴달 옴부즈만은 향후 수용시설의 확보와 관련하여 국제보호시설서비스 (IPAS)가 현재 관행인 기존 건물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난민수용시설을 새로 짓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타당성을 조사하기로 했다는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틴달 옴부즈만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300명 이상의 난민신청자를 긴급 수용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업무를 수행한 국제보호시설 서비스와 기타 관련기관들을 칭찬했다. 그러나 옴부즈만의 가장 큰 관심사는 현재 수용시설의 물리적인 제약과 수용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국제보호 신청자들에 대한 처우이다.

※ 출처: "IRELAND: Ombudsman says direct provision complaints show accommodation system is unsustainable" (IOI 홈페이지>News, 2020.4.24.)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코로나19 온라인 민원 센터 개소 (Jakarta globe, 2020.4.29)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보건, 금융, 안전 등의 분야에서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민원 센터를 개소했다.

-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은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동안 불만족스러운 공공 서비스를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민원 센터를 개소했다.
- 온라인 민원 센터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보건 서비스, 금융 서비스, 교통 시스템 및 안전 관련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 암줄리안 리파이(Amzulian Rifai) 옴부즈만은 지난 수요일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국민들은 공공 서비스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민원 센터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부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홈페이지나 왓츠앱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또한 옴부즈만은 각 주정부에 민원접수 담당자와 이메일 주소를 지정했다.
- 옴부즈만에 따르면 온라인 민원 센터는 1차 유행보다 더 심각할지도 모르는 코로나 2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 정부부처들과 정부기관들의 예산에 상당한 삭감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 옴부즈만은 ‘팬데믹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 일부는 정부부처들과 정부기관들의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공공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또한 옴부즈만은 공공 서비스는 국민의 권리이며 팬데믹 중에도 계속 해서 제공되어야 하고,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절대로 등한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그러나 위원장은 팬데믹에 대처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공공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지금까지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 옴부즈만은 ‘정부는 보건서비스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경기부양책, 세제 혜택과 경제회복 정책에 405조 루피아(약 29조 원) 이상을 투입했다. 막대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여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옴부즈만실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신용회복, 코로나바이러스로 격리 되어 있으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을 위반한 대중 집회 개최 등에 대한 민원 42건을 접수했다.
- 암줄리안 옴부즈만은 ‘지원금 지급, 격리상태 환자의 치료 부재, 신용회복 요청에 대한 답변 지연, 도로 봉쇄 또는 대규모 공공 집회 금지 위반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검증팀이 모든 민원을 분석하고 옴부즈만실의 조사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 온라인 민원 센터 개소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고 옴부즈만 위원장은 덧붙였다.

※ 출처: "INDONESIA : Ombudsman Launches Covid-19 Online Complaint Center" (Jakarta Globe, 2020.4.29.)

핀란드 : 옴부즈만,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다수 민원 접수 (IOI, 2020.4.30)
 핀란드 의회 옴부즈만실은 코로나19 관련 보건·사회복지 민원 100건 이상을 접수하여 자체적으로 조사·처리하고 있다.

- 핀란드 의회 옴부즈만실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비상사태와 관련된 민원 100건 이상이 접수되었다. 또한 옴부즈만실은 자체적으로 여러 사안들에 대해 대응하기 시작했다.
- 이들 민원은 모든 행정 부서들과 연관되어 있었고, 그 중 다수는 보건, 사회복지, 사회보험과 관련되어 있었다. 교육과 국가 최고기관들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접수되었다.

조사 중인 민원

- 페트리 야스켈라인넨(Petri Jaaskelainen) 의회 옴부즈만은 우시마(Uusimaa)주 국경을 넘는데 적용되는 제한과 관련된 민원 두 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첫 번째 민원인은 정부 법령에 명시된 것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국경을 넘지 못하게 하여 민원(2330/2020)을 제기했다.
- 두 번째 민원인은 국경 이외 지역 간 이동 제한에 대한 경찰의 모니터링 방식과 관련된 좀 더 일반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은 우선 이동 제한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경찰이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2464/2020).
- 또한 옴부즈만은 장애인이 사전에 산소호흡기 치료를 거부당했다는 민원(2480/2020)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상황에서의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안(2219/2020)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 다른 민원과 관련하여 마이야 삭슬린(Maija Sakslin) 부옴부즈만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보호자의 상주를 제한하는 헬싱키와 우시마 보건국의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했다(2463/2020).

- 위기 상황 동안 학교급식 제공과 관련해서도 여러 민원이 접수되었다. 파시 폴로넨(Pasi Polonen) 부옴부즈만은 학교 급식 제공에 요구되는 사회서비스실의 수요 조사 관련 사안(2393/2020과 2435/2020)과 모든 학생 및 가족이 접근 가능하지 않은 특정 장소로부터 급식을 수령하라고 요구한 사안(2462/2020)에 대해 정보를 요청했다.
- 또한 폴로넨 부옴부즈만은 대입시험 조기 시행 담당 부서에 민원 두 건 (2089/2020과 2094/2020)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했다.

해결된 민원

- 진행 중인 민원 중 일부는 이미 해결되었다. 일례로 위탁 중인 아동과의 연락과 관련된 민원(2130/2020)의 해결 결과가 www.oikeusasiamies.fi에 공개되어 있다.
- 치료를 받는 환자들과 관련된 민원(2477/2020)과 우시마주의 봉쇄가 페이예트헤메(Paijat-Hame) 지방 미르스킬라(Myrskylä)와 푸킬라(Pukkila)의 의료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병원의 결정과 관련된 민원(2477/2020)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 경찰 감시 하에 재소자 2명을 가석방 하는 절차를 보류한 것과 관련된 민원은 가석방 준비와 관련조건에 대한 조사가 약 1주 간 보류된 후, 재소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집에서도 다시 시행될 수 있도록 형사 제재국이 지침을 변경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비상사태 중 노인 의료 상황에 대한 점검 강화

- 팬데믹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노인 의료의 실태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현장을 점검하는 데 평소보다 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삭슬린 부옴부즈만의 주도 하에 비상사태 동안 점검이 강화되었다. 점검은 주로 전화와 화상회의로 실시된다. 간호 인력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과 보호자들에 대한 인터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옴부즈만은 비상사태 동안 지자체가 노인 의료 시설을 감독하는지와 부조리 발생 시 시설 인력이 지방정부

행정청에 연락을 취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

옴부즈만실의 자체 조사

- 야스켈라이넨 옴부즈만은 외국인 구류 시설과 수용시설에서 코로나19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조사를 시작했고 핀란드 이민국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2138/2020).
- 삭슬린 부옴부즈만의 주도 하에 2446/2020번 민원과 관련하여 비상사태 중에 노숙인 수의 감소와 노숙인을 위한 사회복지 및 보건 서비스를 알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조치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노숙인들은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 폴로넨 부옴부즈만은 50개 이상 지역에서 운영을 보류하기로 한 사회보장·보험기구의 결정에 대한 조사를 주도하고 있다(2488/2020).
- 또한 폴로넨 부옴부즈만은 비상사태 하에서 기초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습 지원과 취학 및 학교급식 보조 등의 지원에 대한 조사를 주도하고 있다(2505/2020). 근본적인 문제나 개선 필요성 등과 함께 이와 관련된 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교육문화부에 요청했다.
- 폴로넨 부옴부즈만은 교도소의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비상사태가 시작된 이후 교도소로부터 접수된 민원은 소수이다.
- 폴로넨 부옴부즈만은 장애연금과 재활보조금 신청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4620/2019). 사회보장·보험기구는 2018년과 2019년에 장애연금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 처리 시간을 달성하지 못했다. 장애연금 신청 처리 센터와 전문의 센터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사태로 인해 사회보장·보험기구 업무와 수당 관련 업무 처리 및 처리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수개월동안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 출처: IOI "FINLAND : Ombudsman receives a large number of complaints related to the state of emergency" (IOI 홈페이지>News, 2020.4.30.)

유럽연합: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 (IOI, 2020.4.30)

유럽연합은 코로나19로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국의 경찰, 사법부, 보건 분야 관계기관들이 협력하여 여성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길 촉구했다.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가 시작된 이후 경찰, 여성 보호시설, 시민단체들은 여성을 상대로 한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런 심각한 인권 유린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아직도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되었다. 유럽성평등연구소(EIGE)와 유럽연합기본권청(FRA)은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계기로 여성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럽의 어떤 나라도 양성평등을 달성하지 못하면 반부패 유럽국가 연합 의장은 공공부문의 투명성이 어떤 형태이든 부패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했다. 가정폭력이 얼마나 만연한지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당하는 폭력의 신고율이 만성적으로 낮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 반쪽짜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각국 정부는 폭력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사법부, 보건 분야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피해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유럽성평등연구소의 카를리엔 쉘레(Carlien Scheele) 소장은 말한다.
- 유럽연합기본권청의 마이클 오플래허티(Michael O’Flaherty) 소장은 앞서 발표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없을 때에도 유럽연합 지역 내 여성 5명 중 1명은 가정폭력을 겪은 경험이 있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주부들은 더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 최근 가정폭력의 급증은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이 코로나 위기 상황 동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하고 향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영원히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봉쇄와 격리가 계속되면서 여성들은 더 높은 가정폭력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 이러한 위험은 현실이다. 살인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살해당한 여성의 64%가 배우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손에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 많은 유럽연합 국가들이 재빠르게 움직여 상담을 지원하고 호텔에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이나 신고를 위한 전화 핫라인을 홍보하고 있다.
- 유럽성평등연구소와 유럽연합기본권청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평상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보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학대 피해 여성 보호소의 침상 수는 유럽연합 21개국이 서명하고 유럽연합이 승인하기로 한 이스탄불 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 봉쇄조치가 종료되면 새로운 과제들이 나타날 것이다. 불안정한 수입과 실업, 경기침체 등 경제 불안으로 인해 폭력이 발생할 수 있어 폭력 피해자들이 학대를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유럽연합기본권청의 앞선 조사 결과 생계 곤란을 겪는 여성의 30%가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계 곤란이 없는 여성의 폭력 경험 비율인 18%에 비해 훨씬 높다.
-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유럽성평등연구소와 유럽연합기본권청은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 ▶ 이스탄불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은 유럽연합 국가들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긴급 접근금지 명령을 적용할 수 있다. 법령에 따라 이미 이러한 명령이 적용 가능할 경우 경찰은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찰과 사법당국, 보건 부문은 힘을 합쳐 여성에 대한 폭력의 위험을 억제해야 한다. 해당 부문 전문가들이 적절한 자원을 가지고 여성 폭력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 ▶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상호 협력하여 이러한 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측정하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 ▶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많은 조치들 중 우수사례를 공유해야 한다.
 - ▶ 많은 유럽연합 국가들은 (예를 들어 소수 인종이나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의 법적 정의를 가지고 있다.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행되는 여성과 여아 살해를 의미하는 페미사이드의 실질적인 법적 정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유럽연합 조약의 범죄 목록에 추가하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지지한다. 그렇게 되면 여성 폭력의 구조적 본질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촉진될 것이다.
- 여성이 폭력에 노출되는 한 양성평등은 불가능하다. 양성평등이 달성되지 않으면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계속될 것이다.

※ 출처: IOI "EU : Let's step up our efforts to end domestic violence"
(IOI 홈페이지>News, 2020.4.30.)

**호주 : 빅토리아주 공립학교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IOI, 2020.5.20)**

호주 빅토리아주 옴부즈만은 많은 경우에서 이해충돌의 처리 없이 학교 교장 및 임원들이 친인척을 채용하거나 친인척과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주의회에 제출했다.

- 빅토리아주 옴부즈만은 빅토리아주 공립학교 교장 가족과 친척들이 교장의 적절한 신고나 이해충돌에 대한 처리 없이 학교에 계속 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 데보라 글라스(Deborah Glass) 옴부즈만은 빅토리아 주의회에 공립학교 낙하산 인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이번 옴부즈만 보고서가 이번 사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글라스 옴부즈만은 '교육부는 지난 10년간 이해충돌에 대한 권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 왔다'고 말했다.
- 또한 옴부즈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많은 조사 결과 우려되는 점은 공립학교의 일자리나 계약 건이 이해충돌 신고나 처리 없이 교장 또는 고위 임원 가족이나 친지, 관련 사업체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옴부즈만 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실시된 옴부즈만실 조사 사례 3건이 포함되어 있다.
 - ▶ 이해충돌 신고나 계약의 공고 없이 8만 달러(약 9,500만 원) 상당의 학교 보수공사 계약을 교장의 배우자에게 주기 위해 학교에 강요한 교장의 사례
 - ▶ 교육부에 이해충돌을 신고하지 않고 단순 지원업무에 자신의 성인

자녀 두 명의 채용을 제안한 교장의 사례

▶ 1년 후 시점까지 교육부에 이해충돌을 알리지 않고 기간제 교사 채용에 자신의 자녀 중 한 명을 승인한 교장의 사례

- 글라스 옴부즈만은 청렴정책을 더 잘 알리려는 교육부의 노력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 교육부 정책은 다수 장소에서 다수의 문서를 통해 배포되었으나 이들 교장 모두는 자신의 의무에 대하여 분명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 글라스 옴부즈만은 ‘대부분 이러한 의혹의 당사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의 의무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 또한 글라스 옴부즈만은 ‘이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컸다.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 그들의 청렴성과 가족·친척들이 맡은 역할이 적합한지 의문이 제기되었고, 학교의 능력에 기반한 채용에 대해 신뢰가 저해됐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글라스 옴부즈만은 이번 옴부즈만 보고서가 학교 교장과 임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교육부의 노력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교장 및 기타 학교 임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리더십은 위로부터 시작된다. 가능한 한 그들의 배우자나 자녀, 친척이나 기타 관련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규칙과 그것을 어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AUSTRALIA : Complaints about nepotism in Victorian government schools ‘continue unabated’” (IOI, 2020.5.20.)